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나서라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남성 배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낙태를 허용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해 34만 건 이상의 낙태가 행해지지만 그 중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낙태죄’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현실

이처럼 낙태가 “불법”인 상황은 많은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쉬쉬하며 괜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고, 낙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낙태약 ‘미프진’은 해외 50여 국에서 판매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고, 그 비용은 9알에 무려 39만 원에 달한다. 불법으로 인해 약 거래가 음성화돼 중간에 수입금을 챙기는 ‘낙태 브로커’가 횡행할 정도이다.

2010년 낙태 단속이 강화되기 전에도 이미 미성년자 낙태의 26퍼센트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뤄졌다. 임신한 10대 청소년이 시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했다는 경찰 보고도 있다.

낙태권은 여성의 건강과 삶을 지키고, 사회적 평등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권리이다.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이라는 말처럼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의사도, 국가도 아닌 여성의 결정할 문제다.

여성에게 낙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공문구가 될 것이다. 낙태 권리는 여성의 인생을 계획하고 원치 않는 출산의 두려움 없이 성을 즐기는 데도 중요하다.



© Drooker.com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역대 정부들은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 왔다. 이런 관점에서 1960~80년대에 정부들은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며 피임과 낙태를 장려했다. 그러나 이후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들은 낙태 통제를 강화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낙태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낙태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고 낙태 비용은 솟구쳐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아야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도 낙태 처벌 강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반발

에 직면한데다, 정권의 위기가 겹쳐 낙태 처벌 강화 시도는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낙태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권력층과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시도가 벌어질 수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합법화를 해야 한다. 안전하고 질 좋은 낙태를 보장받기 위해 낙태 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무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성평등 공약들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는 여성의 낙태권을 위한 계획은 빠져 있다.

그러나 여성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서 낙태 문제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곧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할 계획이다.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문제는 꼭 다뤄져야 한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이 커져야 한다

고무적이기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낙태권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여 우익 정부의 낙태 전면 금지 시도를 좌절시켰다. 폴란드만큼 낙태 규제가 극심한 나라이 아일랜드에서도 낙태 처벌 헌법 조항 폐지 운동이 대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9월 30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대규모 낙태권 옹호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국제적인 낙태권 옹호 운동은 세계의 여성들을 고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의 대규모 시위는 한국에서 ‘검은 옷 시위’ 등 낙태죄 폐지 시위가 일어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줬다.

지난해 폴란드의 낙태 전면 금지 반대 시위는 진보, 좌파 단체들

과 노동조합 등 대중적인 세력들이 참가하며 10만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보수적인 우파들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낙태죄를 폐지하려면 운동이 대중적으로 커져야 한다.

낙태가 불법인 현실은 많은 여성들뿐 아니라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평범한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가난할수록 고통이 커지는 계급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낙태죄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낙태죄를 폐지시키자. 특히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지지하는 여성들과 좌파, 진보세력, 노동운동 활동가 등이 나서 낙태권을 위한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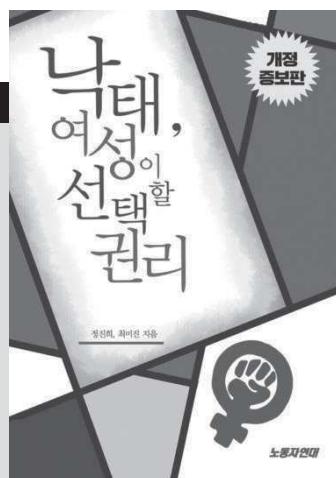
낙태권을 둘러싼 왜곡과 진실

낙태는 살인?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아는 모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여성 신체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을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는 주체도 여성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살아 숨 쉬는 인간인 여성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인큐베이터’로만 본다는 뜻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여성차별적 주장일 뿐이다.

피임하기 싫어서 낙태한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여성들이 피임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낙태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피임이 낙태보다 더 간단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완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콘돔의 피임 실패율은 13.9퍼센트다! 게다가 피임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어떤 경우든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 추천 소책자

개정증보판

낙태, 여성의 선택할 권리

정진희·최미진 지음, 노동자연대, 52쪽, 3,000원

이 소책자는 여성에게 낙태권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며 낙태 반대론자들이 유포하는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